

한·일과거청산 국제학술 심포지엄 - 지상중계

일본의 솔직한 사과·배상 선결과제

무엇을 청산할 것인가

고은

(시인·본지 논설위원)



일본의 이웃나라에 대한 오랜 계략은 임진왜란을 넘어 고대 한일관계에 계속돼 온 크고 작은 침략행위까지 소급되어 미망하다. 그러나 일본은 일제 식민지 기간만이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본은 때로는 강변, 때로는 일사후퇴를 번갈아 가면서 한일합방의 진실자세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선린의 바탕이 되는 공

수 있었다고 말하는 전후 지도층의 뻔뻔스런 발언들은 36년간의 일제강점이 한국인에게 은해했다

크고 작은 침략행위까지 소급 명분과 함께 '실질 청산' 되어야

통된 역사인식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한일관계의 큰 장애물이다. 일본 외무성의 문서에 따르면 이미 명치유신 직후의 일본은 향후 1백년간의 구도로서 한반도를 삼키기 위한 면밀한 국가계획에 왕의 결재까지 받아놓고 있었다. 이같은 계획이야말로 최근 한일 합방이 양국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일본 수상의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36년간의 한반도 통치가 한국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든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고 망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과거청산이란 커다란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

과거청산은 명분과 함께 실질도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당시 서독 수상과 대통령의 진지한 언동을 통해 나치는 물론 독일 국민전체에도 진정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다. 이런 명분 위에 물질적 배상이나 반성의 표시를 반영구적으로 지속했던 것이다. 일본 역시 과거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책임있는 정부기구를 통해 실천을 보여야 한다.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서든각)는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한일과거청산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한일합정과 과거청산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1965년 체결된 한일합정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과거청산을 위한 공통의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를 싣는다. <편집자>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가 '한일합정과 과거청산의 과제'란 주제로 마련한 학술심포지엄. 65년 한일합정을 폐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 요지

고은씨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투명한 사과를 바탕으로 한 과거청산과 우리 스스로의 식민지배 청산을 통한 새로운 21세기 동아시아 건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성 덕성여대교수는 토론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일합방과 한일합정의 원인무효와 개정논의는 물론, 일제하의 군인 군속문제와 재일교포 문제, 정신대·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 잔류자 문제, 희생자 유골송환 문제, 동도 양국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주정기를 회복한 다음 일본의 민주사화단체와 협조해 일본의 반성을 통한 근국주의의 포기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외국어대교수는 한일합정 문제와 관련 "국제법적으로 이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36년간의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임을 확인받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쳐 한일간 기본조약을 무효화시키고 재합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일본이 세계의 평화대국으로 거듭 내려면 한일간의 문제

새로운 선린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한국 내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강력한 의사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작가 오다 마코토씨는 양국 시민의 교류를 통한 한·일과거사의 바람직한 청산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일합정이 현재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고 시민간의 진지한 교류를 원리토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창

한·일 협정의 문제점

한상범

(동국대 교수·법학)



1965년에 체결된 <한일합정>이란 조약문서는 '한일기본조약'을 비롯해 '교포의 법적 지위 협정' '이업 협정' '청구권협정' 및 '문화협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조약문건의 문제는 △합의과정에서 뒷거래 흥정이 있었으며 한국의 민족자존과 국민이익을 양보·포기해 불리하게 되었으며, △문건의 내용자체가 잘못되어 중군위안부 문제등 중요

이로써 무효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일제의 1905년부터의 강점 지배와 만행은 합법이란 해

뒷거래 흥정... 日측 과거 '합법' 해석 위안부·강제징용등 주요사안 빠져

한 사안이 빠져 있고 △합정의 집행이나 해석에서 착오내지 협잡이 있다는 점들이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적 피해, 민족적 모욕과 함께 친일 부패 세력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일합정>은 한일간의 과거침략사실에 대해 제2조에서 합방조약을 강요해 체결한 날짜(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본문을 비껴가고 있다. 일본측 해석으로는 합방조약의 무효는 1948년 한국이 독립이 됨

석이 된다. 이는 <한일합정>이 일본이 배울 준 한국독립의 축하조약이며, 청구권 자금(3억불)의 성격도 배상금이 아닌 축하금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일합정>은 군인 군속, 강제연행한 노무자나 중군위안부로 끌려가 죽거나 생존한 이들이나 그 유족에 대해 그들 개인이 가지는 권리까지도 몰수할 권한이 없다. 정부는 재일교포를 생지육의 피해자로 방치하게 한 이 때 국 합정을 즉시 개정하여 교포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과거청산 실제와 과제

강만길

(고려대 교수·사학)



일본은 앞으로 북핵과의 '조일 조약'을 한일조약과 같이 침략과 강제성이 엄폐되고 배상이 배제

후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약 20만15천명, 군사요원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1939~1945년 사이에 14만15천여명이었다. 일본군 육군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18만17천여명이었는데 그중 5680명이 사망했고, 해군은 사망자 250명을 합쳐 2만2천300명이었으며, 군속이 사망자 2792명을 포함한 7만4백여 명이었다.

적절한 배상·한반도 통일에 중립을 日 경제·군사적 패권주의 포기해야

된 조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사회당 소속 수상까지 나서 한일합방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조선에 유입된 일본자본이 80억 정도인데 비해 일본이 조선에서 가져간 액수는 금과 은과 군사비, 저축자금, 국공채 등을 합쳐 최소한 340억엔 이란 통계가 나왔다. 이는 그들의 식민지배가 이익을 쫓는 주장이 허구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1939~1945년 사이에 모집동의 명목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 노동자가 72만4천7백명, 1941년 이

일본은 과거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상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군사적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평화주의의 국가로서 자세를 확실히 함으로써 피해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발전과 협력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의 평화적이고 대등한 통일이 선결과제이다. 일본은 한반도 지배가 분단으로 연결된 사실을 기억하고 통일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감정보다 국제법 대응 바람직 日잔재 청산·민족정기 회복 절실 원폭피해자·정신대·유골 송환등 해결 우선돼야

고 말했다. 정교수는 또 "일본은 한일합방 한 일협약 등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조약행위가 합법적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국제법적인 근거와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한상범교수는 한일합정의 폐국·굴욕성을 집중 추궁하면서 "우 리 먼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

를 국제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징용, 정신대 문제등을 해결할 법적인 책임을 문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한반도 불법 침략의 인정과 피해 보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협약의 개정 등을 주장한 강만길교수의 발표에 대해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장은 "한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2중적 자세는 일본의 패권추구욕을 감추려는 위장전술"이라면서 "한일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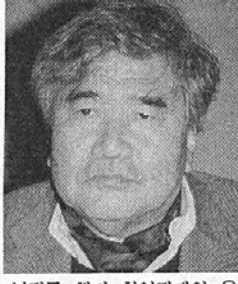
일 배재대교수는 "일본의 시민운동은 한국과는 달리 제한된 시민이 체념상태에서 하는 소규모운동"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시민운동은 집단불감증을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또 "일본은 천황제가 존속하는 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정치와 국민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망언은 계속될 것이기에 국가적인 과거사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 새로운 모습

오다 마코토

(일본작가)



불평등했던 한일관계의 올바른 교류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두나라 시민간의 교류가 선행돼

는 기타 영역에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에 중의외에 제출한 '국회 결의'를 통해 중군 위안부들의 비참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고 개인 보상을 민간차원의 모금 형식으로 하는 '민간기금'도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으로 한국에서 문제가 된 '한일합

"합방경위 양국민 공동논의 하자" 한일합정 현실고려 새로운 체결을

야 한다. 올해 1월 17일 새벽 5시46분에 니시노미야(西宮)시를 포함한 효고(兵庫)현 남부지역에 '한산대지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때 침착한 관동대 지진의 기억과는 달리 한·일 양국의 시민은 국경을 초월해 상부 상조를 통한 공생관계를 보여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것을 경신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전후 50년'은 끝났으며 이제부터는 '공생의 시대'라고 떠벌리면서 과거와 현재에 걸친 책임을 내팽개치려는 움직임은 정치 사회 또

방'의 경위에 대해서는 양국의 시민이 모여 철저히 논의를 한 후 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역사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일관계는 규정해 온 한일합정의 근본적인 규정도가 있어야 한다. 한일합정은 냉전 구조의 산물이라고 현실상황을 고려하면서 시민간의 진지한 교류를 원리토 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근거한 영세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아시아·세계와의 밀접한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흥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筮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 3개월, 전화: (02) 723-5665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출주업 경변 전입도로변 법당지 요지, -대지 70평 도로 포장 시설지, -연락처: 김(주석) 0441-851-3866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2회실시 4월·8월, 국·중·고졸, 대학 졸업과정,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